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3월 17일

제07-12호

2007년 중국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만수 북경사무소 소장 (jmansoo@kiep.go.kr, Tel: 86-10-8497-2870)

나수엽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86-10-8497-2870)

주요 내용

- 2007년 중국은 8%의 성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0%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고도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고도성장 기조는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도 지속될 전망이고 중국 경제의 거시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 및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중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속도가 빨라지고 해외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 위안화 절상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기업 및 기관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WTO 가입 과도기 종료 후 중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보다는 당분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FTA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양자간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법인소득세법 통과를 포함하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함.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여건 악화, 인건비 및 토지 비용의 상승, 노동자 권리 강화, 준법경영의 강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강조 등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기업의 투자결정 및 경영이 이루어져야 함.

1. 2007년 정부공작보고를 평가하는 관점

- 2007년 3월 5일부터 16일까지 북경에서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이하 전인대)가 개최되었음.
 - 매년 열리는 전인대 석상에서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이하 「보고」)」를 통해 그 해 정부 운영의 기본 방침을 천명함.
 - 2007년 보고는 ‘11차 5개년계획(2006~10)’, 2006년 정부공작보고, 2006년 12월 ‘중앙경제 공작회의’의 연장선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획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¹⁾
- 그러나 정부공작보고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이며, 특히 2007년에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에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07년 말 후진타오 정부의 집권 2기를 출범시키는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전인대로서 집권 2기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임.
 - 둘째, 2006년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적정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환율이나 해외투자 등 외환관련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음.
 - 셋째, 2006년 말 중국의 2001년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일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포스트 WTO 시대)의 개방정책의 방향이 이번 「보고」에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
 - 넷째, 기업소득세법, 물권법 등 새로운 법령이나 「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기타 정책 방향 중에서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1) 2007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견실한 고도성장, 삼농(三農) 문제의 해결, 지역간 협조 발전, 기업 및 금융 개혁의 지속, 대외개방 확대 등의 주제가 경제 분야에서 다루어졌으며, 그 밖에도 사회보장, 교육, 의료, 위생, 국방,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11차 5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자주적 혁신이나 산업구조 고도화 목표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새로운 목표나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음.

2. 「보고」의 주요 내용과 전망

가. 10% 대의 고도성장 지속

- 2007년에 중국은 2006년과 동일한 수준의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²⁾ 이는 2007년에도 10% 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 「보고」에서는 2007년 거시경제 운영의 목표로 경제성장률 8% 정도, 도시 신규취업자수 900만 명 이상, 도시 등록 실업률 4.6% 이하, 소비자가격지수 3% 이하, 국제수지 불균형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음.
- 2006년 3월의 정부공작보고에서도 2007년과 동일하게 성장률 8% 정도, 소비자가격지수 3%, 도시신규취업자 900만 명, 도시 등록실업률 4.6%, 국제수지의 기본적 안정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은 2006년 경제성장률 10.7%, 소비자가격상승률 1.5%, 도시 신규취업자 1,184만 명, 도시 등록실업률 4.1%를 달성하였으며, 2007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 물가안정, 고용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07년 말 후진타오 정부 2기 출범을 위한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일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이 예상됨.

표 1. 2007년 정부공작보고에 제시된 주요 거시경제 목표

(단위: %)

항목	2006년		2007년
	공작보고의 목표	실제 달성	공작보고의 목표
경제성장률	8	10.7	8
소비자가격상승률	3	1.5	3
도시 신규취업자	900만 명	1,184만 명	900만 명
도시등록실업률	4.6	4.1	4.6
에너지 효율성 개선	4	1.2	

2) 전통적으로 중국은 연초에 매우 보수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이는 객관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임.

나. 국제수지 불균형 개선을 위한 노력

- 2007년 거시경제 운영 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특히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이 2006년에 비해 커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의 경우에는 “국제수지의 기본적 안정”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07년에는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의 개선”을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현재의 자본 및 무역 수지 흑자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표출

표 2. 국제수지 및 위안화 환율에 관한 인식의 변화

제목	시기	내용
2005 정부공작보고	2005. 3	국제수지의 균형 유지,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기초 위에서 안정을 유지
환율제도 개혁	2005. 7	2% 평가절상 및 복수통화바스켓에 근거한 관리변동환율 제도 실시
2006 정부공작보고	2006. 3	국제수지의 기본 평형,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 유지
중앙경제공작회의	2006. 12	국제수지평형을 촉진하여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
2007 정부공작보고	2007. 3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의 개선, 위안화 환율 형성 메카니즘의 진일보 개선, 외화관리 강화, 외환보유액의 합리적 사용 채널과 방식의 탐색

자료: 政府工作報告(각 년도); 「中央經濟工作會議確定明年八項工作任務」(2006. 12. 8) 등에서 작성.

- 2006년 외환보유액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이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년째 매년 2,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 만 약 2,500억 달러가 증가하여³⁾ 연말 1조 66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하였음.
- 따라서 위안화 절상폭 역시 2006년의 3.35%에 비해서는 훨씬 커질 전망이며(5% 이상 예상), 그 절상폭은 중국의 국제수지 동향에 따라 결정될 것임.

3) 2006년 중국은 9,691억 달러의 수출과 7,916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함으로써 1,77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한편, 695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161억 달러의 대외직접투자(비금융부문)를 수행하였음.

- 2007년 들어 중국의 무역수지는 1월 158억 달러 흑자, 2월 2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서⁴⁾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가속되지 않고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어려움.
- 환율 일일 변동폭 확대를 포함한 관련 제도의 변화 가능성⁵⁾에 관한 추측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보고」에서는 ‘위안화 환율 형성 메카니즘의 진일보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인민은행장도 환율변동폭의 확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변동폭 자체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임.⁶⁾
 - 보유외환의 적극적 해외투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방향은 2004년 이후 지속된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走出去)과 외화투자기금의 창설 등을 통한 금융투자 확대임.
 - 이는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⁷⁾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임.
 - 이와 관련 진린칭(金人慶)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외환보유와 외환투자를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정상적인 외환관리는 외환관리국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한편, 국무원이 지도하는 외화투자공사를 설립” 하겠다고 밝혔음.
 - 이 ‘외화투자공사’는 이미 설립과정 중에 있으며, 싱가포르 투자청을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함.
 - 또 「보고」에서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대출, 외환, 보험 등 제도를 정비하여 실력, 신용, 경쟁력을 갖춘 각종 소유제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할 것을 밝히고 있음.⁸⁾

4) 2006년 1,2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95.6억 달러와 24.5억 달러로 흑자가 3배 이상 급증하였음.
 5)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화에 관해서는 은종학(2005. 12. 9), 「중국의 최근 외환제도 개혁 추이와 2006년도 환율 운용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6) 저우샤오환 인민은행 총재는 “변동폭은 아직까지 한번도 다 활용된 적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변동폭이 언제 부족할 것인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발언하였음. 「擴大人民幣匯率浮動區間時機由市場決定」(2007. 3. 5), finance.sina.com. 이러한 발언에서 연내 변동폭 확대 가능성을 유추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민은행장은 이미 2006년 전인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人民幣匯率浮動區間今後可以擴大」, 『國際金融報』(2006. 3. 6), www.xinshenet.com.
 7) 위안화 평가절상이 가속화되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가격 경쟁력이 커짐으로써 국내 중화학 산업의 육성에 불리함.

- 동시에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여 해외에서 기업들이 맹목적인 투자나 악성 경쟁을 하는 것을 회피' 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다. 서비스 산업의 추가 개방보다는 경쟁력 강화

- WTO 가입 과도기 이후(포스트 WTO)의 대외개방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대되었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추가개방 일정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음.

- 오히려 대외개방의 확대가 아닌 산업구조의 고도화 관련 서술의 맨 처음에 서비스업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물류, 금융, 정보, 컨설팅, 여행, 지역서비스 등 현대적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

- 이는 WTO와의 약정에 의한 서비스 산업 개방이 2006년 말로 완료된 상황에서 당분간 새로 개방 분야를 확대하기보다는, 우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취해질 것임을 시사함.

-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은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WTO가 규정하는 160개 서비스 개방 대상 중에서 중국은 100개를 개방하였으나, 발전도상국 평균은 54개이며, 미국도 101개만을 개방'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의 현재 개방수준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시

- 동 회견에서 중국의 관세 수준에 대해서도 발전도상국 수준을 넘어서는 낮은 관세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⁹⁾ 중국이 향후 자발적으로 개방을 크게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본격적인 추가 개방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2008년 후진타오 정부의 2기 출범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라. 외자기업 진출 및 경영 환경의 변화

- 「보고」는 수출입 구조의 고도화, 외자이용의 개선, 중국기업 해외투자제도의 완비, 다자협상

8)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2003년 28.5억 달러에서 2004년 55억 달러, 2005년 122.6억 달러, 2006년 161.3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으나, 2005년의 경우 케이만군도, 홍콩,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의 투자가 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해외투자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투자의 혜택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투자(round-tripping)되고 있다고 평가됨.

9) 보시라이 상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9.9%, 전 세계 평균 39%, 비농산품 관세율은 9%, 전 세계 평균 29%, 농산품 15%, 전 세계 평균 60% 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중국의 개방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하였음.

적극 참여, FTA의 안정적 추진 등을 대외개방 확대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 또한 기업소득세법안이 통과되는 등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화가 전망됨.
- 수출입구조의 고도화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우대 혹은 억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보고」에서 제시된 수출입구조의 고도화 방향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수출입 구조의 고도화 방향

	수출	수입
촉진	자주브랜드, 고부가가치 상품 서비스 상품, 농산품	에너지, 원자재, 선진기술 장비, 핵심 부품
억제	에너지 다소비/오염유발 산업	

- 특히 에너지 다소비 및 오염유발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 해당 산업의 가공수출에 대한 면세혜택을 중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규제가 계속될 전망이다.
- 또한 외자이용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첨단 제조업 및 연구개발 기능의 이전,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의 외자도입, 외자 인수합병 제도의 정비,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우대조치의 시정 등을 강조
-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법인세)율을 통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안이 이번 회기 중 통과됨(3월 16일).¹⁰⁾
- 이에 따라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33%,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24%(우대세율은 15%)로 이분되어 있는 내외자 기업의 법인소득세율이 25%로 통일됨.
- 단 현행 법률에 따라 세율 우대를 받고 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5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쳐

10)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KIEP 북경사무소(2007. 2. 28),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참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2년 면세 3년 반감 등 각종 감면조치도 남은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함.

- 또한 하이테크 기업,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설비 산업, 서부지역 투자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보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우대조치의 시정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외자기업에 관한 각종 조세 및 토지사용 관련 우대 조치들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최저임금제 외에 시간당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것임을 명시 하였음.
- 이는 주로 일용직 및 시간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건설, 음식, 숙박, 청소 등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이 분야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
- 그 밖에도 2007년 중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반독점법, 국유자산법 등 기업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임.¹¹⁾
- 특히 강력한 노동자 보호조항들로 인해 2006년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노동계약법」의 경우 2007년 6월 3차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입법 일정이 잡혀 있어 2007년 중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임.

마. 기타 주요 불균형 분야의 적시(摘示)

- 과열논란을 일으켰던 부동산 정책, 난개발이 우려되는 토지정책, 11차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에너지 절약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부동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1) 토지가 부족한 중국의 현실에 맞는 주택 건설 및 소비 모델의 형성, 2)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부동산 투자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가격 상승 억제, 4)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제시
- 토지정책에서는 1) 종합적 토지 이용계획의 마련과 집행 및 별장/골프장/연수원 등 건설의

11) 우방구어(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상무위원회 공작보고(3월 11일).

금지, 2) 토지의 집약적 활용, 3) 공업용지 임대료의 최저가격 표준 집행, 4) 토지관리 책임 제도입 등을 제시

-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는 11차 5개년계획에 따라 2006년 GDP 당 에너지 소모율을 연간 4% 정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1.2%를 줄이는 데 그쳤음을 인정하고, 1) 에너지 사용 표준 및 평가 체제의 정비, 2) 발전, 제련, 시멘트, 비철금속, 코크스 등 분야에서 낙후된 설비의 도태, 3) 주요 산업에서의 에너지 절약 강화, 4) 가격, 조세, 대출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정책체계 정비, 5)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 등 정책방향을 제시

■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2007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행해질 전망이다.

- 토지 임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지 불법 전용 등으로 조성된 공업용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공장부지를 임대 또는 무료로 제공하던 사례도 줄어들 것임.
- 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연료세 도입 등 에너지 가격인상도 이루어질 전망이나, 연료세의 경우 진린칭 재정부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도입하기보다는 각종 도로 통행료를 대체하는 수준에서 도입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역시 현재의 에너지 가격이 희소성이나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 2007년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2007년 중 1) 사실상 고도성장정책이 유지되고, 2) 위안화 환율 절상폭은 확대되는 한편, 3)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그 밖에도 한국기업의 진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가. 고도성장 기조에 대한 인식

- 후진타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균형을 강조하는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뿐 아니라 집권 2기 동안 고도성장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6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양질의 고도성장(又好又快)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어 금번 「보고」에도 반영되는 등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 지속되고 있음.
-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강조하는 등 후진타오 정부가 고도성장보다는 균형성장이나 분배를 우선시한다는 관측이 누차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경제정책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4년간의 경제운영 실적에서 확인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고도성장임.¹²⁾
- 지난 수년간 중국 경제의 과열 및 경착륙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0% 대의 고도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하였음.
-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전체 경제안정과 관련되는 거시적 리스크와 기업의 경영환경과 관련되는 미시적 리스크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거시적 리스크 면에서 금융부실, 경기과열, 경착륙 우려 등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임.
- 금융부문(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0년 29.2%, 2003년 17.8%, 2006년 7.5%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음.
- 경기과열 논란의 시발이 되었던 10% 대의 고도성장이 별다른 기복 없이 4년간 정착되었으며 9%~10%의 고도성장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분야별로 투자과열이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금리인상, 기준율 인상, 창구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억제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하지는 않았음.

12) 수년 전부터 농촌문제(이른바 三農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2006년에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10.4% 증가한 반면,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은 7.4% 증가에 그쳐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음.

- 2006년의 경우 재정소득이 22% 증가하고, 매년 국채 발행규모를 줄이는 등 안정적인 재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¹³⁾
- 따라서 미국 등 세계 경기의 급변이 없는 한 중국은 지금까지와 같은 고도성장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고도성장에 대응하는 정부와 기업의 대중전략 마련이 필요함.
- 기업들은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출 및 투자기회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과 WTO 가입에 따른 개방계획이 완료된 금융과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위안화 절상 및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 대비

- 위안화 절상은 우리 경제에 호재이나, 중국에 투자한 일부 기업의 경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것이며, 특히 2006년 크게 둔화되었던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에서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임에 유의해야 함.
-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해외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공장신설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제조업 투자뿐 아니라, 신설되는 '외화투자공사' 나 적격국내 기관투자자(QDII)를 통한 다양한 금융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외자도입이 필요한 다양한 국내 투자 프로젝트에 좋은 조건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3)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세수 급증에 따라 발생한 세계(歲計)잉여금 중 500억 위안(약 6조 원)으로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을 설립하여 재정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키로 하였음.

다. 중국의 포스트 WTO 시대의 개방 유도

- 「보고」에서 중국이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FTA 협상을 포함한 각종 양자간 협력 채널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 2006년 이전에는 중국이 WTO 가입시의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양자간 협상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았음.
- 중국이 자발적으로 추가 개방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각종 양자간 경제협력 대화에서 시장개방을 중국의 협상카드로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2007년 예정된 한중 FTA 공동연구나 향후의 FTA 협상 등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의 개방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이미 2006년 12월부터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매년 2차례씩 개최기로 하는 등 중국의 시장개방 일정을 미국의 의도대로 선점하기 위한 채널을 확보하였음.¹⁴⁾
- 일본 역시 아베 수상 취임 이후 중일간의 정치적 해빙무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¹⁵⁾
- 한국기업들은 당분간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약정에 따라 이미 개방된 금융, 유통, 통신 등 중국 서비스시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향후 중국정부가 추진할 추가 개방 방향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개방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추가개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집하여 협상에 반영하도록 준비해야 함.

라.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 요인과 대응방향

-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14) 미·중 경제전략대화의 의미에 관해서는 지만수(2007. 2. 20), 「미·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 아베 수상 취임 이후 최근 중·일 경제관계의 변화에 관해서는 KIEP 북경사무소(2007), 「아베 총리 방중 이후 중일 경제관계의 변화」, 『한중경제포럼』, 07-1.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법안으로는 금번 전인대에서 통과되는 기업소득세법, 물권법¹⁶⁾과 2007년 중 심의될 전망이다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사회보험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이 있음.
- 기업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충격을 과장할 필요는 없으나, 중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외자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첨단기술 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유지되므로 첨단기술 산업 인정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정부와 지원기관들은 향후 관련 기준이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투자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등의 경우 1) 기업의 실제 인건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2) 법 시행과 함께 기존에 통용되던 각종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퇴직금 적립 등 인건비를 증가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법이 시행되면 임금의 30~40%에 달하는 사회보장비의 징수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 노사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정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묵인 아래 통용되던 여러 경영관행이 불법행위로 규정되고 단속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기업들은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1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고 관련 지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¹⁷⁾

16) 물권법의 경우 국유자산 유실의 방지, 집체자산 남용의 방지, 농민/도시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용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외자기업의 투자환경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업의 토지 사용 비용이 늘어나거나 토지를 기초로 한 담보 대출의 가능성이 커지는 등 관련 변수가 있어 향후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 「보고」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2006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연도별 목표를 제시했던 2006년과는 달리 2007년 「보고」에서는 연도별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음. 그러나 마카이 발개위 주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11차 5개년계획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 목표가 완화된 것은 아니며, 매년 균등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음(3個不變, 결심, 목표, 책임은 변하지 않음).

- 대중 투자기업 중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나 오염물 배출이 많은 업종의 기업들은 규제 강화나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반면 중국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오염절감 설비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기회가 커질 것이므로 관련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